

“정부 예산서 빠진 현안 사업 살려라” 광주시·전남도, 국회 예산 반영 총력

광주, 미래차 등 신규사업 집중
전남, 관광산업 등 5천억 목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뚫고 역대급 내년도 국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성공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지막 예산 심의 단계인 국회를 상대로 최종 예산 균하기에 나섰다.

사도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점을 집중 부각하고, 그동안 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칠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 현안 사업으로 국비 3조239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연 전년도 반영액 3조1057억원보다 940억원(3.0%)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3조2155억원보다도 242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7조 5131억)보다 9.2% 늘어난 8조2000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심의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상

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3개월간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한 사업이 삭제되기도 하고, 통과하지 못했던 지역 숙원사업 예산이 다시 부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단 그동안 정부 부처를 상대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누락 또는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정차권과 함께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 인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을 회생시키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신규 사업인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 기업 역량강화(총 사업비 135억원) 초기 사업비 10억원을 비롯한 미래차 부품 메타팩트로 전환지원 및 실증사업(200억원) 20억원, 완전자율주행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285억원) 34억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스타트업 육성(226억원) 44억원, 광주국제퍼포먼스 페어(240억원) 20억원, ACC연계 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290억원) 7억5000만원 등을 국회 심의에서 부활시키겠다는 각오다. 시는 또 계속사업인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안인 563억원보다 87억원이 늘어난 650억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 외에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

고 있다.

전남도 역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존 정부 반영액보다 최소 5000억원 이상을 더 반영하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다.

당장 추가 건의할 주요 예산으로는 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해남 호반 문화예술 남도 달밤 등 사업 내용이 구체화돼 우선 착수가 가능한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선도사업(154억원)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20억원) 사업이 거론된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등으로 올해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곧바로 예산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립 난대수목원(6억원) ▲광주의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해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231억원) 등이다.

아울러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캠퍼스 조성(5억원)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5억원)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30억원) 등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징어 게임’ 미국 에미상 6관왕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의 프레스룸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제74회 에미상 드라마 부문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오른쪽)과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정재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2·17면 /연합뉴스

“지방재정 격차 해소한다더니 ... 특별교부세마저 수도권 집중”

특교세 10년 분석해보니

서울·인천·경기 4분의 1 쟁거가

인구와 경제가 집중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지방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의 취지로 광역지자체에 배정하는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마저 더 쟁거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금융 등 민간자본에 국가재정까지 수도권에 쏠리면서 수도권과 비대해지고, 지방은 인구 유출과 재원 부족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수도권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이나 민간자본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재정을 집중하는 정부의 재정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정부가 17개 시·도에 배정한 특교세는 모두 14조377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1조5010억원, 경기 1조6837억원, 인천 5383억원 등 3조7230억원을 가져갔다. 가장 부유한 수도권의 3개 지자체가 특별교부세의 4분의 1 이상을 쟁거 것이다. 광역시는 부산

(7571억원), 인천, 대구(5313억원), 광주(4054억원), 대전(3258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구·경제 규모에 따라 특교세를 배분한 것이다. 전남은 비교적 선전해 경북(1조326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1조1995억원을 받았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서울과 경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각각 76.3%, 61.6%로 전국 평균(45.3%)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는 41.1%, 전남 24.2%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도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돌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로,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제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전라남도 SOC 르네상스 시대 실현!

사상 최초 전남 예산 11조원 시대 개막!
2022년 국고예산 8조원 돌파!
역대 최대 SOC 국가계획반영 쾌거!

